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수립에 따른 협의 양상 변화

**|함영진·이원천|**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관련 사업 현황 및 과제

**|송수종·황성환|**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 협력 기제로서 사전협의의 역할  
-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이영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성과 및 개선 방안

**|원소윤|**



#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관련 사업 현황 및 과제<sup>1)</sup>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of Prior-Consulted Local Social Security Projects for Youth Employment

송수중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황성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원

이 글에서는 청년 고용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 경과, 청년고용사업의 동향, 사전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고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유의 사항 및 쟁점 중심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년간 최종 협의를 완료된 170개 청년고용사업의 협의요청서에 제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상, 세부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수준), 지급 방법, 사업 예산 규모, 연령 조건 등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을 도출하였다. 협의요청서의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사업과 기존 제도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는 모든 사전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선별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 1 들어가며

202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이다. 하지만 15~29세 청년의 '쉬었음'<sup>2)</sup> 인구

1)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지원 업무' 과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조사표 7번 문항('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에는 쉬었음 이외에도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 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육아, 가사,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연로, 결혼준비, 군입대 대기 등 17개 항목에 응답할 수 있는데, 청년 응답자가 16번 선택 문항(쉬었음)에 응답한 사례에 해당한다.

는 46만 명으로 나타나 작년 8월 대비 13.8%포인트 증가하였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3년 들어 증가로 전환하여 40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2023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지만(그림 1), 지속적인 청년 인구의 감소(작년 8월 대비 24만 7000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하여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청년층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기

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집중 이탈함에 따라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청년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 개입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축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친화적인 정책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의 청년 고용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경과를 살펴보고, 청년고용사업의 동향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고용

[그림 1]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주: 관계부처 합동(2023. 11. 15.)으로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저자가 그림으로 표현함.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유의 사항 및 쟁점 중심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2 청년고용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

지자체가 사전협의 요청한 사회보장사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협의를 완료한 지자체의 청년고용사업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단위 및 수준 등 연구전략은 일반적으로 가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별 협의요청서의 행정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전협의 안건으로 제출한 고용실업, 소득빈곤, 주거 등 여러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고용 정책 사업에 국한된다. 분석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이다. 2020년을 제외한 이유는 코로나 19 사태 확산에 따른 긴급한 정책 지원이 많았기에 2021년 이후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지자체의 청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심의 안건은 총 170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45건, 2022년 48건, 2023년 77건이 협의 완료되었다. 수도권과 지역의 심의 건수를 비교하면 지역(104건, 61.18%)이 수도권보다(66건, 38.82%) 월등히 많은데, 이것은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3년간 최종 협의가

완료된 170개 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 세부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수준), 지급 방법, 사업예산 규모, 연령 조건 등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핵심 정책 대상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미취업자(구직자) 133개(78.24%), 재직자 21개(12.35%), 청년 창업자 13개(7.65%) 등의 순서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미취업자(구직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 정책 대상의 대부분이 15~29세에 속하는 고졸 또는 대졸 미취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연령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업자(구직자) 등의 연령 요건이 지자체가 명문 규정하고 있는 연령 범주에 따라 광범위하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즉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연령 요건에서 시작되는 연령은 19세(107개, 62.94%)와 18세(59개, 34.71%)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는 연령은 39세(110개, 64.71%), 34세(38개, 22.35%), 45세(11개, 6.47%), 49세(6개, 3.53%) 등 다양한 연령 범주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49세로 지원이 끝나는 정책도 보이는데, 이들 정책 소관 지역들은 경남 ○○군, 전남 ○○군, 강원 ○○군, 전남 ○○군 등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로 청년정책이 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구 정책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책 대상으로 미취업(구직)자인 사업이 대다수이듯이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취업 지원(149개, 87.65%) 사업이 다수로 확인되었다.

둘째, 미취업(구직)자 또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고용 정책 사업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분석하였다. 이것은 정책의 세부 지원 내용을 의미하는데,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검토가 새로운 사업의 신설 또는 기존 사업의 확충(변경)을 위해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 사항이 된다. 분석 결과 청년이 제공받는 세부 지원 내용은 여학·자격증 취득 비용(65개, 38.24%), 면접 준비 및 수당(25개, 14.71%), 구직활동비 지원(21개, 12.35%), 근속장려금(20개, 11.76%), 창업지원(13개, 7.65%), 구직활동비+취업장려금(4개, 2.35%), 취업장려금(3개, 1.76%) 등의 순서

[표 1] 세부 지원 내용

(단위: 개, %)

세부 지원 내용	빈도(개)	비율(%)
여학 자격증 취득 비용	65	38.24
면접 준비 및 수당	25	14.71
구직활동비 지원	21	12.35
근속장려금	20	11.76
창업지원	13	7.65
일경험 및 인턴 지원	5	2.94
구직활동비+취업장려금	4	2.35
취업장려금	3	1.76
갭이어 프로그램	2	1.18
교통비 지원	2	1.18
정착지원금	2	1.18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1	0.59
도서 구입비	1	0.59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1	0.59
온라인 콘텐츠 배우처 지원	1	0.59
운전면허 학원비	1	0.59
직무교육+근속장려금	1	0.59
직무교육+해외 기업 탐방	1	0.59
해외 대학 연수	1	0.59
총계	170	100

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의 원자료(2024년 6월 말 기준)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요청한 청년 고용 정책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년의 입직 전 취업준비 단계에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이를 보다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중앙부처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어학·자격증 취득 비용, 면접 준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미취업(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입직 이후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취업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1회성으로 지급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속장려금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1인당 지원 금액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요 쟁점이 된다. 분석 결과 1인당 지원 금액(수준)이 가장 많은 사업은 사업 특성상 창업자금 지원과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창업자금 지원으로 연 5000만 원(본인 부담 10%) 지원하고, B 지자체에서는 학생에게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4200만 원(첫 3년간 월 50만 원, 이후 2년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근속장려금 3개 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 2개 사업이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업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창업자금이 필요하거나 1~2년간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의 1인당 수혜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부 지원 내용 정책 사전협

의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어학·자격증 취득 비용(65개, 38.24%)과 면접 준비 및 수당(25개, 14.71%) 지원 정책은 주로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C 지자체에서는 학교 졸업 후, 직장 시작 전 또는 직장생활 중 잠시 쉬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프로젝트, 역량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D 지자체의 해외 취·창업 사업은 국내외 직무교육과 해외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데, 2개 사업 모두 1인당 약 750만 원을 지원한다. 획일화된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넷째, 1인당 지원 금액에 이어 1차 연도 사업예산 규모를 구간별 범주(50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3개(1.76%),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23개(13.53%),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사업은 49개(28.82%), 1억 원 미만 사업은 95개(55.88%)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사전협의 안건의 약 85%가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연도 사업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3개 사업에서는 2021년도 A 지자체의 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약 103억 원 예산 규모이고, 2022년도 역시 A 지자체의 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약 112억 원, A 지자체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이 약 277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은 근속장려금 등 세부 지원

내용의 특성 이외에도 1인당 지원 금액 수준, 지원 대상 인원 규모, 연간 지원 횟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세부 지원 내용이 하나의 사업예산 범주에 쏠려 있지 않고 사업예산의 구간별 범주에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세부 지원 내용의 특성보다는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지원 여건에 따라 사업예산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다섯째, 전달체계에서 청년 고용 정책 사업의 지급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현금, 지역화폐, 바우처, 현물,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서비스 111개(65.29%), 현금 39개(22.94%), 지역화폐 12개(7.06%), 현금 및 바우처·서비스 5개(2.94%), 지역화폐 및 바우처·서비스 2개(1.18%), 현물 1개(0.59%)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바우처·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일부 사업은 현금, 지역화폐의 지급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급 방식과 세부 지원 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바우처·서비스는 주로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면접 준비 및 수당, 구직활동비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주로 근속장려금과 면접 준비 및 수당 등 지급에 활용되고, 현금은 주로 근속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등 소득기준 설정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선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은 예산 제약상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에게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책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별을 위한 기제로 연

령, 소득, 재산, 주소지, 근로 경험 여부, 대학생 여부, 실업, 구직자, 재직 근로자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중위소득 등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은 32개(18.82%), 소득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은 138개(81.18%)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32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구직활동비 지원 15개,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6개, 근속장려금 5개, 근속장려금+취업장려금 3개, 그리고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원, 교통비 지원, 면접 준비 및 수당,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각각 1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예산 규모별로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예산 규모의 3개 사업 모두 소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23개 사업 중 12개 사업만이 소득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중위소득 등 소득기준이 설정되고 1인당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B 지자체의 청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직자에게 근속장려금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다음은 D 지자체의 청년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재직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소득기준이 설정된 30개의 사업은 8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우선순위 선발을 위한 소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E 지자체의 청년 부부 대

상 창업지원 사업(연 5000만 원)과 F 지자체의 취업지원 사업(4200만 원) 등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다수 사업에서는 우선순위 선발을 위한 소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청년 고용 정책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 사전협의를 협의 완료된 안건은 총 170건이며, 지역의 안건이 약 61%로 수도권보다 많다. 핵심 정책 대상은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자(구직자)가 약 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고졸 또는 대졸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18~49세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요건은 광범위하나 사업예산, 지원 대상 인원, 1인당 지원 금액(수준)은 제약되어 우선순위 선발 기준이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는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 둘째,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취업 지원(약 88%) 사업이 다수인데, 청년이 제공받는 세부 지원 내용을 구분하면 여학·자격증 취득 비용(38.24%), 면접 준비 및 수당(14.71%), 구직활동비 지원(12.35%), 근속장려금(11.76%), 창업지원(7.6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고용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내일채움공제, 창업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보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쟁점 사항이 된다. 셋째, 1인당 지원 금액(수준)이 가장 많은 사업은 사업 특성상 창업지원과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요 쟁점이 된다. 한편 지자체에서 협의 완료된 안건의 약 85%가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 규모는 세부 지원 내용의 특성보다는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 지원 여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넷째, 지급 방식은 주로 바우처·서비스인데, 일부 사업에서는 현금·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중위소득 등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은 약 19%인데, 소득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로 나타났다. 다수 사업에서 한정된 수혜 대상자에게 현금, 바우처, 지역화폐 등의 지급 방식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청년고용사업의 사회보장심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 및 선발 기준 마련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청년고용사업 사전협의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 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업과 기존 제도 간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이다. 이것은 청년 고용 정책뿐만 아

나라 교육, 소득빈곤, 주거 등 모든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협의요청서는 유사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한 해당 사업을 보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 간의 관계 검토 시 중복·보충성 여부가 쟁점 사항이지만, 이 외에도 참여 제한 대상, 중복 수혜 방지 기준, 지원 금액의 적절성, 지역 간 복지급여 격차 최소화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먼저 구직활동비, 면접 준비 및 수당, 청년수당 등 취업지원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중앙부처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고용사회안전망으로서 저소득 미취업자, 청년니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한다. 취업 역량을 개발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소득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지원 관련 사전협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비교 검토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설 또는 확대하는 취업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취업지원 또는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소득, 재산, 근로 경험 등 일정한 선별 요건이 적용

되며, 연간 사업 목표 인원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가 한정되기 때문에 취업취약계층을 충분한 금액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미취업자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 사업 시행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에게 일정액의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를 시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의 보충성 확보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의 협의요청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시한 연령 및 거주 요건 이외에도 적절한 우선 순위 선별 기준을 설정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나 고소득 근로 및 자산 소득자의 참여가 불가하게 하는 등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보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요청서의 사업이 보충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사업이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 대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지자체의 협의요청서 사업 대상이 미취업자 청년이되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년이어야 함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제외하는 참여 자격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중복참여 제외 대상 사업 목록을 확충하고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앙·광역·기초 간 체계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지자체 사업처럼 중앙부처 사업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청년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6개월은 예시), 일몰야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참여자를 방지하는 등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제외 대상 기준을 확충하여 선별적인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직무교육, 구직활동비 지원 등 직무역량 개발 관련 청년 고용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되는 중앙부처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능력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3년간 청년 고용 정책 사전협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38.24%(65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앙부처 청년 지원 사업 중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없다. 반대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청년 대상 어학 자격증 취득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하게 능력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훈련 비용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지자체 사업에 비해 보다 장기적·보편적·충분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

존 제도에 대한 보충성이 인정되더라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 대상 기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협의요청서에 참여 제한 및 제외 대상 기준에 유사사업 중복 수혜 제외 등 중복 수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제외 대상 목록을 확충하도록 재협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지자체의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몰야시스템 활용 등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관련 정부 및 광역지자체 유사사업(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서울시 청년수당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청년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자격증(예: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 자격, 어학)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5년간 1인당 300만~500만 원 훈련비용)가 있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실제로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비용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지원 가능한 훈련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 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것인데,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수도권에 비해 청년이 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

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복 수혜를 받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복참여 제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지자체의 청년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 중복·보충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직자 근속장려금, 입직 단계 취업장려금, 일경험 및 인턴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관련 청년 고용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되는 중앙부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기업의 고용기획 확대 등을 위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장려금은 크게 고용촉진 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고용조정 지원 사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촉진 지원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업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고용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경우 사업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 애로 수준이 낮은 대상까지 사업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중손실을 초래하여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대제 개편이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조정 지원 사업은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등 여러 사업체는 해고 등의 고용 안정을 피하고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고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이나 고용형태 변경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필요에 따라 실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촉진 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고용조정 지원 사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중앙부처 수준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지만, 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지자체의 협의요청서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다양

한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 이 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6개월간 취업 유지 시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자영업자(폐업자 포함)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보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들이 각기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제외 대상 기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협의요청서가 제외 대상 기준에 국가,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을 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라고 명시하여 해당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러한 참여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외 대상 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등 재직자 대상 청년 고용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되는 중앙부처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중앙부처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게 많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소득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을 유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A지자체의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은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정규직)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을 하는 등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보충성이 있다. 중앙부처에서 먼저 도입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청년에게 인기가 높지만 예산 규모 및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모집 공고 이후 조기에 소진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급요건의 재직 기간, 연령, 거주 요건 이외에도 혼인 상태, 부모, 생계 수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별도의 선발 기준(우선순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지급·보조금 제도의 한계점으로 도덕적 해이(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및 사중손실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수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 대상 기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집행 과정에서도 중도탈락 방지에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대상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료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 간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 검토는 중앙부처 사업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의 모든 사업도 비교 검토의 대상이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C 지자체의 수당 지급 사업과 유사 중복이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부처 사업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미취업자 청년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6개월은 예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참여자를 방지하는 등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제외 대상 기준을 확충하여 선별적인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요청서 단계에서 미리 중복참여 제외 대상 사업 목록을 확충하여야 한다. 전달체계에서는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선발 기준

사전협의 과정에서 연간 지원 대상 규모와 1인당 지원 금액 수준 등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기준(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이하, 사회적 약자 선정 등)이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출한 대부분의 협의요청서에서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지만, 실태조사 DB 또는 행정 DB를 활용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연령,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미취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등 일반적인 참여 자격 요건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취약한 청년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또는 수립된 사업량 대비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우선순위 선발 기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근 3개년 사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지원 금액(수준)이 가장 많은 사업들도 중위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등 별도의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 고려 방안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선발 기준도 없다. 예컨대 연 5000만 원을 지원하는 E 지자체의 청년 부부 창업지원사업, 또한 학생에게 1인당 최대 4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F 지자체의 취업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세부 지원 내용 중 협의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사업은 중앙부처의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창업지원사업(창업자금, R&D, 멘토링, 창업교육)이 지원하지 않으나, 청년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순위 선발 기준이 없다.

정부 지원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비용

효과성의 제고이다. 모든 보조금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좋은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도한 수혜자 그룹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하고, 둘째 재정 부담이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셋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 취약청년 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우선순위 선발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권오성, 박민정, 2009; 송수중, 2021에서 재인용).

한편 청년 고용 지원의 목적이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있으므로 노동시장 내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발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지자체가 협의 요청한 사업처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단기간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 선정 절차로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 매출액, 이윤 증가율 등 보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제시하여 정규직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구체화된 선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성장 잠재력이 있고 청년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지원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 다.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지자체가 제출하는 협의요청서가 중앙·광역 또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

는지 또는 해당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의 지원 수준에 맞게 기준중위소득을 설정하고 있는지도 쟁점 사항이다.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기존 제도와 형평성이 있는지, 기존 제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지역적 특수한 정책 지원 내용인지 등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에 비해 지급 금액이 더 많아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재협의하기로 결정된 사업도 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A지자체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변경 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39세 청년에게 12개월간 50만 원씩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35~39세 청년구직 활동 지원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지원 대상자보다 소득이 높으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지원 수준으로 맞춰 수정하도록 재협의 요청을 하였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부처가 보편적 고용복지 시스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인원 및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중앙부처의 지원 금액에 더하여 지자체가 지원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보충하여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직업훈련, 일경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으며 고용노동부 내 청년고용사업 간 또는 교육부 현장실습 등 중앙부처 사업 간 유사·중복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고용사회보장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며 보충성의 원리에도 충실한 것이다. 지역 정주 여건 개발을 통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방에 살더라도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역 청년이 지방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기본권과 주거, 의료, 문화의 기본 서비스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협의요청서의 신설 또는 확대(변경)되는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협의요청서에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극히 일부 사업이 시군구의 지역 청년 실태 및 현황조사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게다가 특정 지역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생활비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넷째, 중앙부처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지만,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실험적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A 지자체의 청년 ‘갭 이어(gap year)’ 사업이 그 예이다. ‘갭 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기간을 뜻한다.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정책적 수요를 보완해 주는 보충적 성격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동 사업이 기존 진로·직업교육, 취업교육과 다른 점은 정해진 틀 안에서 진행되는 직무검사·상담, 교육, 강연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동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또는 적성과 직업의 불일치에 따른 괴리를 해소·완화할 수 있는 간접적 수단, 휴학 중 현장 경험을 위한 수단, 민간 전문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다른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1인당 지원 금액이 약 750만 원으로 매우 높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4 나가며

2013년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지자체의 청년 고용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 고용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사전협의 경과, 청년 고용사업의 동향, 사전협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고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유의 사항 및 쟁점 중심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청년고용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년간 최종 사전협의가 완료된 170개 청년고용사업의 협의요청서에 제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상, 세부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사업예산 규모, 연령 조건 등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핵심 정책 대상이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자(구직자)이고, 이들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취업 지원 사업이 다수여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어학·자격증 취득 비용, 면접 준비 및 수당, 구직활동비 지원, 근속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 금액(수준)이 가장 많은 사업은 사업 특성상 창업지원과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은 주로 바우처·서비스이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현금·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우선순위 선발을 위한 중위소득 등 소득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고용사업 사전협의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을 도출하였다. 협의요청서의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사업과 중앙·광역의 기존 제도 간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는 모든 사업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선발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존 제도 간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는 세부 지원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지자체의 취업지원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임금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과 관련하여 내일채움공제 등 구체적인 제도 사례를 들어서 사전협의 과정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정리하였다.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연간 지원 대상 규모와 1인당 지원 금액 수준 등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이하 등이 제시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전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그간 진행된 사전협의 과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코 아니며, 보편적 복지 국가의 고용복지 사회안전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제도 간 체계적 연계성 및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데 사전협의 과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권오성, 박민정. (2009).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행정논총, 47:1, 277-309.  
송수종. (2021).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계간) 2021 여름호 고용이슈, 92-109.

#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of Prior-Consulted Local Social Security Projects for Youth

Song, SooJo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wang, SeongH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rogress made in prior consultations regarding social security projects on youth employment, explore recent trends in these youth support initiatives, and present key issues raised during the consultations. From this I derived responses to these issu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when putting up youth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prior consultation. I reviewed basic data from consultation applications for a total of 170 youth employment projects on which prior consultations were completed during the 3-year period between 2021 and 2023. Building on this review, I then analyzed their key features—target groups, details of the support offered, the amount of benefits per recipient, the forms in which benefits are delivered, total budget, eligible ages, and so forth. From this analysis I ascertained that a key issue inquired into in all prior consultations was how a new project or proposed expansion connects to existing programs—whether it is duplicative of or supplemental to them. Other concerns taken seriously during the prior consultations include who the program intends to support, based on what selection criteria, and in what forms and amounts.